

보도 일시	2022. 5. 18.(수) 14:00	배포 일시	2022. 5. 18.(수) 13:00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선우 (044-201-2111)
		담당자	사무관 김준걸 (044-201-2118)

농식품부, 식용유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결과

- 식용유 공급 문제 없어, 정부와 기업이 적극 협력 대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5월 18일(수) 오전,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용유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씨제이(CJ)제일제당, 롯데푸드, 사조대림, 농심, 오뚜기 등 주요 식용유 공급사 5개 업체와 식품산업협회가 참석하였으며, 업체별 유종별 식용유 국내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식용유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유종별 수급 상황>

국내 식용유 연간 소요량은 대두유 60여만 톤, 팜유 20여만 톤 등 약 114만 톤 수준으로 이 중 대두유 20만 톤, 옥수수유 4만 톤 등 24만 톤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90만 톤은 주로 수입 후 정제 과정을 거쳐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공급사들은 운송 중인 물량을 포함하여 2~4개월 가량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용유 수입량(2020년)>

구분	합계	대두유	팜유	카놀라유	야자유	해바라기유	기타
수입량(톤)	905,419	391,454	200,000	135,336	49,177	37,292	92,160
비중(%)	100.0	43.2	22.1	14.9	5.4	4.1	10.2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업소용·가정용으로 사용량이 가장 많은 대두유의 경우 미국·아르헨티나 등 주요 수출국으로부터 차질없이 도입(연간 약 40만 톤)되고 있으며, 국내 생산(연간 약 20만 톤)을 위한 원재료인 대두 도입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팜유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 수출제한(4.28.)에도 불구하고 국내 식품업계는 말레이시아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급에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기존 재고 이외에 5~6월에도 평년 수준 사용량인 3만 3천 톤(연간 약 20만 톤 수입) 도입 중이고, 하반기 이후 물량도 계약된 대로 정상 도입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정용과 치킨 가맹점(프랜차이즈) 등에 주로 사용되는 카놀라유, 올리브유 등도 차질없이 수입되고 있으며, 해바라기씨유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는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대체 공급선을 확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요 수요처별 동향>

라면, 제과, 제빵 등 식품공장용 물량이나 가정용 소포장 물량(1ℓ 이하)은 예년에 비해 수요업체 발주량에 큰 차이가 없으나, 유통대리점을 통해 공급되는 업소용 캔식용유(18ℓ), 가정용 대용량(1.8ℓ) 주문량이 최근 크게 늘어난 상황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제한 등의 영향으로 식용유 가격 상승을 우려한 가수요가 일부 유통망에서 발생하는데 기인한다는 것이 공급사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아울러 공급사 관계자들은 국내 식용유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일부 가수요만 진정된다면 우려하는 소비자들의 식용유 구입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현재 시점에서 식용유 공급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점을 밝혔다.

<향후 대응>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식용유 공급 문제는 치킨집, 중국음식점, 전집 등 중소외식업체,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적극 협력하여 식용유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 불안 심리로 인해 필요 이상 미리 구매하는 상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민·관 수급 점검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하여 정확한 수급 정보 제공 등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식용유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식용유 수입 관련 품목의 할당관세 등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며,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도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간 유통상 등의 유통 교란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각 기업 차원에서 발주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기업과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